

‘축산물은 식량’ 소비자 인식 확산위한 정책 시급 지상중계 /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대책 간담회



출처: 축산신문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와 수입축산물의 급속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축종을 망라한 하반기 극심한 불황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더구나 시도때도 없이 불거지고 있는 축산물 유해론은 국내 축산업의 발목을 잡는 또다른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본지에서는 효과적인 장단기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 일 시 : 2012. 6. 21(목)
- 장 소 : 제1축산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이상수 과장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 김연화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김남배 회장 (전국한우협회)
- 이병모 위원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정병학 회장 (한국계육협회)
- 이창호 회장 (한국오리협회)
- 김실중 부회장 (한국육가공협회)
- 이홍재 위원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김흥원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 이상기 사무국장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 사 회 : 장지현 상무 (본지 편집국장)

‘완전 단백질’ 축산물 중요성·경제적 가치 제대로 평가 받아야

애국심 호소 보단 올바른 육류 정보제공 등 전략적 소비촉진 유도

수출 활성화 정책 절실... 다양한 요리법·제품개발 자구 노력도

▲사회=최근 삼성그룹은 품질보다는 시장경쟁력에 경영목표를 두었다고 한다. 가격과 품질만으로

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다. 안전하고 품질좋은니까 먹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한다. 하반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어떻게 해야할지 다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가격으로 수입 쇠고기와 경쟁은 힘들게 현실이다. 생고기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12가지 안전검사를 거쳐 무균처리해 유통시키는 생고기 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도축가공시설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생고기로 품질을 차별화, 수입육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부위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식회나 할인행사는 일시적 방편이다. 더욱이 2~3등급육은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오해가 문제다. 학교급식용 불고기로 공급이 이뤄진다면 수입육과 가격경쟁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신선도나 품질면에서는 훨씬 앞설 것이다.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영양사와 소비자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병모 위원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연간 20k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한다. 육류로 따지면 최소한 80~100kg은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부나 콩 등 식물성 단백질도 좋긴 하지만 완전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물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축산물 섭취량은 연간 약 40kg 미만으로 미국의 120kg, 유럽의 70kg에 미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일본(50kg)과 비교해도 적다.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일정기간 동안에는 가축사육에 따른 냄새를 국민들에게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축산물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제 축산

물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축산업이 살길이다.

▲정병학 회장(한국계육협회)=생산비 이하의 육계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육계계열화업체들은 올 상반기에만 8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도 가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한다. 계열화업체들이 도산하면 농가들도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기업들은 수입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최근 학교와 동네 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는 닭강정은 100% 수입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원산지를 표시한 판매업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관심도 없이 물가타령만 하고 있다. 이제 축산물이 식량임을 직시하고 모든 축산정책도 쌀과 같은 식량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직불금은 물론 사료안정기금 도입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축산물이 일정수준 이상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정부는 수입을 통해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책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오리산업도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6월까지 5천만수를 도입해 전년동기의 3천600만수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종축업 등록을 하지 않은 F2는 그 주요인이 되고 있다. 월 300만수의 오리가 F2를 통해 생산되지만 부화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

축산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정작 필요로 하는 곳은 외면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오리산업은 이제 수출 저변화가 살길이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은 오리고기의 잠재시장이다. 훈제오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루빨리 수입위생조건이 마련돼 수출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

▲김실중 부회장(한국육가공협회)=국내 축산물 소비량은 38.8kg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매년 1kg씩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나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2020년까지 58kg의 축산물이 소비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지만 그 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육가공품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축산물 소비량 증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햄소시지는 전체 축산물 시장의 3.6%에 불과하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 햄소시지 품평회에 77점을 출품, 40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그 품질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다. 소비층의 한계가 문제다. 전체적인 축산물 소비촉진 차원에서도 육가공품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이홍재 위원장(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정책은 물론 소비촉진 전략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게는 물가잡기만 존재할 뿐이다. 축산업계도 축산물유해론이 확산되고 극단적인 축산업 매도가 이뤄져도 변변히 대응조차 못하는 처지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농축산업을 지킬수 있도록 기본틀을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수입육과의 전쟁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자급률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식량안보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수입육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거시적 시각의 축산정책도 필요하다. 동물복지 때문에 앞으로 무창계사를 규제하는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현대화사업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한다.

▲이상기 사무국장(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지난해 원유가격 현실화 논란 당시 ‘우유대란’이 우려되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2~3일 축산물 공급 중단이 이뤄진다고 대란이 오는게 아니다. 아예 축산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게 대란이다. 진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어떠한가. 농가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자조금의 경우 TV나 라디오 광고에는 아예 정부 지원금을 사용치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놓았다.

자조금의 일차적인 목표는 소비홍보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매체 광고를 농가들이 걷은 돈만으로 하라고 한다. FTA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정부, 자조금 통제 지양...일몰제 · 지원금 사용제한 재검토

물가잡기 수단 · 규제일변도 정책서 탈피...

자급기반 구축 절실

생산 · 정책, 소비 트렌드 못따라가...

사양관리 · 등급제 개선 필요

체험 통한 소비자접근 · 육가공품 소비층 확대

제도적 지원 긴요

▲김홍원 부장(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농협에서는 전국 1천여개 농협매장을 통해 축산물 시식 및 할인행사를 전개하는 등 축산물 소비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납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할인행사를 하게되면 소비자들이 평소 축산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문제다. 겉핥하면 유통마진이 언론의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건강을 해친다며 지방을 싫어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블링 위주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한우 도축월령을 보면 해마다 도축월령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7개월령 출하를 주문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소비자의 저지방 고기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맛 있는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양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김연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우리 축산업은 지켜져야 한다. 상당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격이 저렴한 고기를 수입하면 좋는데 왜 소비자단체가 반대하는지 의문을 제기해 올 때마다 공산품과는 달리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생산은 이를 못쫓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최고등급을 선택해야 좋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방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블링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진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소비트렌드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축산업계가 정부의 간섭 때문에 자조금을 잘 활용치 못한다면 독립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상수 과장(농식품부 축산경영과)=물가관리는 예전부터 이뤄져 왔음을 이해해 달라. 정부도 축산물 수급안정에 노력하고 있지만 품목별 풍선효과로 인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 국방부가 축산물 수급기관이 아니다보니 군납을 통한 수급조절도 쉽지 않다. 품목별로 살펴보자. 한우의 경우 암소 사육두수가 많은 만큼 소비활성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소비자의 트렌드나 생산비 절감의 시각에서 등급제 개선도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닭강정이 이슈화된 것이 최근이다. 왜 우리 닭고기로 닭강정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제품 개발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게 된다. 정부는 닭고기, 오리고기를 수출전략품으로 선정했다. 수출로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한다.

낙농의 경우 제도개선에 발목 잡혀 온지가 10년이 넘었다. 우유값만 올리는게 낙농대책인지 의문이다.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돼 외형을 넓힐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에 소비가 편중되고 있는 원인을 고민해 보자. 한 때는 양념육이 엄청난 돌풍을 몰고 오지 않았나. 주부들이 요리를 기피하는 추세지만 구이용에 적합한 삼겹살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광고부문에 사용치 못한 부분은 예산당국과 개선여지를 협의해 보겠다. 다만 국회논의시 왜 축산업계에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는지 묻고싶다.

▲사회=지금까지 각 부문별 소비촉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급증하고 있는 수입육 대응방은 무엇이겠는가.

▲김남배 회장=1++ 등급을 소비자가 외면한다고 하는데 구이문화가 발달된 국내 소비자들에게 지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구나 거세를 통한 고급육 장려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제와서 바꾸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2~3등급 역시 품질과 가격 모든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품질경쟁력은 월등하다. 수출도 가능한 것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병모 회장=정부에서는 자조금을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일부 대의원들은 정부지원을 받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마련해 놓으면 정부가 바뀌려 반발도 심하다. 자조금사업에 대한 자주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FMD 이후 미국과 캐나다,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우리나라와 비교할수도 없다. 자급률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식량으로서 축산물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축산물은 식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자조금 사업을 비롯한 모든 광고매체에 자막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당장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

▲김실중 부회장=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제조기준과 판매방법 등 법령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5종의 식중독균에 대해 음성토록한 미생물 기준을 가열 및 비가열 제품으로 구분, 정량화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살균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품질저하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다행이 법령개정이 이뤄졌거나 개정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 부터는 품질이 좋은 다양한 제품 출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판매방법에서 있어서는 축산물가공판매업(가칭)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는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동일장소에서 햄 소시지를 제조, 판매할 경우 외국과는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후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축산물가공판매업이라는 업종을 신설, 두가지 업종이 동시에 영업가능토록 관리법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과 대등한 기준하에서 경쟁력 제고로도 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원 부장=농업생산액 상위 품목을 살펴 보았더니 축산품목이 매년 1개씩 추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쌀은 줄고 축산물 소비는 늘고 있는 것이다. 소비총량에서는 축산물이 쌀의 반을 넘었고 생산액은 2배가 넘었다. 이제는 축산물을 식량으로 접근, 기간산업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축장 건설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화우의 보관기간이 한우에 비해 두배이상 길다. 지방보다는 고기량을 늘릴 수 있는 사양기술과 함께 도축가공 기술의 향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상기 사무국장=아무리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주장해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낙농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장을 체험토록 하는 ‘도심속 목장나들이 행사’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9회를 거치는 동안 43만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비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품목에서도 좋은 참고모델이 될 것이다.

▲이창호 회장=전남지역에서는 개방형 오리 축사 시설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 개방형 하우스에 대한 지원방안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리의 경우 의무자조금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법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계의 중지를 모아 자조금법 개정을 큰 틀에서 모색해 보자.

오리육 수출저변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노력에 일단 감사한다. 생산액 2조원의 오리산업이 3조원으로 확대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리육 시장은 일찌감치 개방돼 왔다. 지금까지 받았으니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올해안에 해외수출이 가능한 수입위생조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홍재 위원장=수입 닭강정과 관련해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 노력에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급증하고 있는 수입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산의 차별화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축산관련 모든 법률과 대외적인 공격에 축산업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다시한번 제안한다.

생산자도 바뀌어야 한다. 어느정도 수급조절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FMD 등 생산자능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다르다. 생산자가 책임을 다할 때 국내 산업을 지키는 나머지는 정부 몫이다.

▲정병학 회장=자조금 지원사업 일몰제라는 정부 방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물가단속만 하면서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재검토 돼야 한다. 축산물은 식량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각종 명분을 내세워 축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

축사시설부터 공공재의 개념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식량으로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될수 있도록 다가올 대선에 대비하자. 특히 닭고기를 비롯한 수입축산물의 원산지표시와 비위생적인 유통단속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동물복지와 생산성 감소한 표준설계도 제시 등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김연화 회장=전략적인 소비촉진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웰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축산물은 안먹으려고 한다. 동물성단백질이 인체에 어떤 기능을 하며, 그 공급원인 축산업이 왜 중요한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요리방법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구워먹는 것 외에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른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요리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개발해서 제공해 주길 바란다. 진정성있는 브랜드의 출현도 시급하다. 일반육과 확실히 차별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소비자들은 가격만 높은 브랜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축산업의 사육기반이 흔들려선 안된다. 소비자단체도 우리 축산물을 지켜야 한다는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안된다. 우리 농가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수 과장=고급육 장려정책을 지금와서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간 정책이 반드시 지금의 1++등급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들이 축산물가격에 불신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양축농가의 적정 소득유지 대책이 중요하다. 육가공품 소비기반이 확보돼야 축산업이 살수 있다는데 공감한다. 정부도 노력하겠다.

수입닭고기 위생문제는 정부에서도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곧 대책이 나올것으로 본다.

한우의 적정사육기간 논란에 대해서는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더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을 외면한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축산업계는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